

지하철 반대 목소리 잠재울 수요 증대·적자 탈피 대책 내놔야

긴급 점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 찬반논쟁 15년 허비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2년 기본계획 최종 승인·고시 후 15년간 노선 갈등, 건설 방식 문제 제기, 찬반 논쟁 등으로 인해 번번이 착공에 실패했다. 광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1호선의 보완 성격인 순환선이 제때 들어서지 못하면서 1호선 기능 저하와 누적 적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으며, 도시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됐다.

광주시가 도시 외곽 개발을 계속하면서 주거지역은 크게 확장됐으나, 공공(대중)교통시스템은 기존 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시내버스의 공급은 불가피하지만 좀처럼 이에 대

경제성 낮아 1호선 적자 되풀이 우려...수요예측 불신도 커 2조 '눈덩이' 사업비 市재정 압박 다른 사업 타격 우려도

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과거 민선 4기와 5기의 논쟁이 모두 2호선 추진을 전제로 했다. 민선 6기의 재검토는 2호선 사업의 폐기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 상태다. 문제는 이번 논쟁이 광주의 도시교통시스템을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지향점 없이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에만 머물렀다는 점이다.

◇당초 5개 노선 계획 이후 추진, 재검토, 재추진=도시철도 1호선이 동서로 가로지르게 된 배경은 지난 1994년 11월 광주 도시철도 노선이 당초 5개 노선 102.65km로 계획됐었기 때문이다. 이후 1호선(소태~월전) 20.2km, 2호선(송암~문화)

13.7km만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3개 노선은 2001년 재검토하기로 했다. 2002년 11월 1호선 동서선(용산동~옥동) 20.1km, 2호선 순환선(호천역~백운광장) 27.4km, 3호선 남북선(백운광장~첨단산단) 20.3km 등 3개 노선 67.8km만 추진하기로 했다.

2호선은 2003년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도 비용 편익분석(B/C) 1.42로 통과했지만, 노선과 국비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착공이 연기됐다. 2011년 11월 3호선이 사라진 대신 2호선이 지상고가 방식 확대순환선(41.7km)으로 변경돼 승인·고시됐는데, 지상고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13년 12월에는 저선도 지하 방식(41.9km)으로

다시 바뀌었다.

민선 6기인 2014년 7월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2016년 2월 '100인 시민위원회'에서 재추진을 결정, 같은 해 12월 30일 광주시가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1단계(시정~광주역, 17.06km)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며, 차량제작 구매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성 부족 및 운영적자 부담 ▲수요예측 불신 ▲급행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간선망 구축 등이다.

◇반대 주장 일부 타당성...시가 대책 내놔야=광주시는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현재 3.5%에서 12.1%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밀집지역 경우 1호선과의 연계 환승으로 도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승용차를 갖고 있는 일반시민들까지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하다. 인구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이용자가 줄 수밖에 없고, 승용차 이용자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 시의 예상은 어긋나고 결국 1호선에 이어 2호선 역시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것이 2호선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대신 도시 외곽 택지지역에 대해서는 급행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간선망을 구축 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데다 투입 예산 역시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문제는 이같은 반대론자에 대한 지적에 대해 광주시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쟁에 휘말릴 경우 행·재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사회 내 혼란도 예상된다.

◇2호선 탓 시 재정은 향후 7년간 '비상'=2호선 착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2조를 넘어섰다. 소요사업비는 2010년 1조7394억원에서 2013년 1조9503억원, 2017년 2조579억원으로 상승했다. 2조579억원 가운데 국비(60%)가 1조2347억원, 시비(40%)가 8232억원이다. 광주시는 2호선 사업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5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9435억원인 채무액이 2024년에는 1조22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상환액도 증가하면서 도시공원 매입 등 다른 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불가능해진다. 또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등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무비율을 2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2018년 이후에는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 사업은 최대한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文대통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195일만에 조각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국무총리와 18명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DJ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최장기 지각 내각이다. <관련기사 4면>

새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결 대선'으로 탄생한 까닭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8일 만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장관 인사를 마무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이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에 연루된 인사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대 인사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장관 인선이 쉽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전문성 못지않게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개혁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시절 개혁적인 교육정책의 대표주자였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문 대통령과 여당에서 오랜 기간 국정철학을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중무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 온 정치인 출신이 많다는 점도 이런 평가를 뒷받침한다.

탕평 인사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맞춰 지역별 배분은 비교적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경남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전남과 충청이 각각 3명, 전북과 대구·경북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18명의 장관 중 5명이 여성(여성 장관

비율 27.8%)으로 채워져서 내각 여성 비율 30%라는 목표에도 상당히 근접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SKY' 출신 인사들이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헤어지는 일만 남았다”

국민의당 끝장 토론...통합 찬·반 가시 돌친 설전 결론 못냈지만...세확장 대결 사실상 '분당의 길'

바른정당과의 통합 즉,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론에 대한 논의를 위해 21일 소집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의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는 양측의 이견만 확인하는 지리가 됐다.

안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도 기존 입장대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하지만, 호남 중진 등의 반대 목소리는 거셌다.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가 회의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분당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분당이 실현되는 않더라도 이번이 없는 한 결국 분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서로 추구하는 정치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헤어지는 일만 남은 것 아니냐”며 “다만, 탈당이나 분당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서로 명분을 축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이 확실해진 만큼 국민의당 내에서는 우선, 안 대표의 중도통합 찬성·반대파로 나뉘어 세확장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견된다.

호남 중진 등 중도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평화개혁연대’를 매개로 당내 유권 확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안 대표의 통합론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의원들이 설득의 대상이다.

물론 안 대표 측도 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도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펴며 유보파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 대결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당원세력 분포도에서는 안 대표 측이 우세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호남 의원들이 많아 안 대표 측이 자신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일단은 통합 논의를 유보하고 당 화합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많아 당내 갈등이 당장 분당 분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안별로 여당이나 야당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향후 정국을 주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갈등이 분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당의 정체성 찾기를 위한 고통스런 과정에 그칠지는 안 대표의 리더십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 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쁜 기쁨!!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쁨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이월 및 예외금발판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